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남영택 사무관 이창남	042-481-5213 042-481-589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0년 10월 16일(금)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日 소부장의 ‘특허 몽니’...삼성 계열사도 피소”, “[日 특허몽니] 통상문제 얹혀 정부 지원도 쉽잖아... 韓 소부장 또 흔들리나”, “‘무더기 소송 길만 터줘’... K-디스커버리 역풍 논란”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20. 10. 15. 1면, 3면]

[보도내용]

- ① 일본기업이 한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기감을 느껴 우리기업 상대로 잇따라 특허소송 제기하여 특허분쟁이 증가
- ② 반도체 업계는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면 출원 특허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외국 업체가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
- ③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 현재 총 8,700여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5,600건, 램리서치 2,000건 특허출원

[사실관계 및 특허청 입장]

- ①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판단할 만한 통계상 근거는 없음
 - (국내) 소부장 분야에서 일본측이 우리기업에 제기한 침해소송은 '16년 2건 → '17년 1건 → '18년 1건 → '19년 1건 → '20년 1건

- (일본內) 일본측이 우리기업에 제기한 소부장 분야의 침해소송은 없음
- (주요국內) 일본이 미·중·EU에서 제기한 소부장 분야 침해소송은
'16년 1건 → '17년 1건 → '18년 1건 → '19년 0건 → '20년 2건
- '20년에 제기된 침해소송 2건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특허로
미국과 독일에서 다투는 하나의 사건

< 주요국 한·일 침해소송 현황 >

(단위 : 건, 전체분야(소부장분야))

특허청·법원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합계
원고 및 피고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침해 소송	'16	4(2)	-	2(0)	-	2(1)	-	-	-	1(0)	1(1)	10(4)
	'17	1(1)	-	-	-	1(1)	-	2(0)	-	-	-	4(2)
	'18	5(1)	-	-	-	-	3(0)	-	-	1(1)	-	9(2)
	'19	3(1)	-	-	1(0)	-	5(0)	-	-	-	-	9(1)
	'20.8	1(1)	-	-	-	1(1)	-	1(1)	-	-	-	3(3)
합계		14(6)	-	2(0)	1(0)	4(3)	8(0)	3(1)	-	2(1)	1(1)	35(12)

출처 : 님즈 IP(www.darts-ip.com)

- 이의신청은 특허분쟁과 직접 관련없는 경쟁사간의 통상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이의신청 증가를 이유로 특허분쟁 증가 주장은 부적절
- 일본에서 일본기업이 우리기업 상대로 신청하는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 건은 예년 수준
- 오히려, 최근 국내에서 우리기업이 일본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추세

< 주요국 한·일 이의신청 현황 >

(단위 : 건, 전체분야(소부장분야))

특허청·법원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합계
원고 및 피고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일→한	한→일	
이의 신청	'16	-	-	22(9)	-	-	-	-	-	-	-	22(9)
	'17	-	-	30(11)	1(0)	-	-	-	1(1)	-	-	32(12)
	'18	-	6(6)	26(10)	-	-	-	2(0)	1(1)	-	-	35(17)
	'19	-	9(8)	20(8)	-	-	-	2(0)	-	-	-	31(16)
	'20.8	-	18(15)	12(11)	-	-	-	4(0)	-	-	-	34(26)
합계		-	33(29)	110(49)	1(0)	-	-	8(0)	2(2)	-	-	154(80)

* 한국은 특허취소신청

출처 : 님즈 IP(www.darts-ip.com)

② 국내 반도체분야에서 내국인이 등록한 특허권이 외국인보다 많으며, K-디스커버리가 도입되어도 외국업체의 제도 악용 가능성은 낮음

- '90년 이전의 내국인에 의한 반도체분야 특허의 국내 등록특허 점유율은 약 25%에 불과, 현재는 등록특허의 60%를 내국인이 점유

< 반도체 분야 주요국 등록특허 현황('20.8.기준)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기타	총합
건수	41,336	6,002	15,602	431	1,084	4,659	69,114
점유율(%)	60	9	22	1	1	7	100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분류기준(H01L)에 따른 집계

-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관이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소송 가능성은 낮음

- (요건) '침해 가능성', '조사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정도'

③ 기사의 외국 3개 반도체 업체의 지난 37년간 누적 출원건수 (16,000여건)는 등록되지 않거나 소멸된 특허까지 포함

- 세계 시장 점유율 50.1%*를 차지하는 3대 장비업체가 보유한 권리존속 중인 유효특허**는 총 5,500여건

* 2017년 매출 기준, 출처 : 가트너

** 등록이후 존속기간 만료, 무효, 등록료 불납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지 않은 유효한 특허

④ 특허청은 향후 재계, 업종별 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임

- 특허청은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7~8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11개의 경제단체, 법조계 등에 의견수렴을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대한변리사회 등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

< 특허청 1차 의견수렴 현황 >

일 자	단 체 명	일 자	단 체 명
7. 21	전국경제인연합회	7. 29	한국지식재산협회
7. 21	중소기업중앙회	8. 12	대한변호사협회
7. 22	대한상공회의소	8. 12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7. 2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8. 21	대한변리사회
7. 23	한국경영자총협회	8. 21	이노비즈협회
7. 27	한국벤처기업협회	9. 15	반도체업체 M社

- 앞으로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계, 업종별 단체, 법조계, 소부장 기업 등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우리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임
 - (재계)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 (업종별 단체) 반도체, 전지, 자동차,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등
 -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 우리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① 「특허분쟁 대응센터」 신설(20.11月), ② 분쟁 모니터링 강화 및 분쟁대응 전략 지원 확대(소부장기업은 우선 지원), ③ 강한 특허창출 지원(지재권 연계 특허개발 전략(IP R&D) 활성화, 특허확보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특허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임